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객체로서의 복사문서?*

-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

이 정 원

영남대 교수

< 目 次 >

I. 서 론

II.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의 입장

III. 개정형법 제237조의 2와 복사문서의 문서성

IV. 결 론

[판시사항]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 심사위원 : 천진호, 김성천, 김혜정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반대의견 : 위조한 문서를 전자복사기로써 복사본을 만들어 낸 경우에 그 복사본은 형법 제231조 소정의 문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복사본을 만들어 낸 행위를 「타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그 행위가 형법 제231조 소정의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경우 문서위조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된 유추확장해석이 되며 같은 법조 소정의 문서의 개념 속에 전자복사본은 포함되고 필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그 규정을 다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형법법규의 명확성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별개의견 : 위조문서의 원본을 복사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위조가 완성되어 작성명의로 진정이 침해된 문서의 표시내용을 사본으로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고 복사로서 새롭게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진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본의 작성행위를 문서의 위조라고 볼 여지가 없으나, 위조문서를 전자복사나 사진복사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은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원본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서 복사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본을 제시하는 행위는 기계적 복사라는 중개수단을 통하여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문서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되므로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사실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요지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83. 3. 25. 공소외 김○○이 제1심판시 골프장시설공사 도급권을 피고인 2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김xx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전자복사하여 그 사본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서○○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I. 서론

1995년 12월 29일의 개정형법은 제237조의 2를 신설하여 “이 장의 죄에 있어

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문서에 관한 죄에서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을 평석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한 1995년 12월 29일의 개정형법 제237조의 2가 신설되기 이전에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도 과연 문서에 관한 죄에서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이론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본 고에서는 문서위조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뿐 아니라 현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대상판결과 대상판결에 기초를 둔 1995년 12월 29일의 개정형법은 제237조의 2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의 입장

1. 다수의견의 관점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에 규정된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그 자체의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진 복사한 경우에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당시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문서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식내용을 보유하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문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¹⁾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문서에 관한 죄에서 복사본은 인증이 없는 한 문서가

1) 同旨,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992. 10, 233면.

아니다”라는 정형적으로 확립되어 유지²⁾되어 오던 전통적인 판례의 입장³⁾을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복사한 후 이를 타인에게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관점에서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①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②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③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④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단 위조한 위임장을 복사하여 제시하는 것은 대상판결에서의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같이 위조위임장을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의 용도에 따른 기능적 이용, 즉 문서의 행사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복사문서의 제시는 “진정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기망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망행위가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로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기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더욱이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서의 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를 작성권자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진실·진정한 문서를 작

2) 이정원, 형법총론, 2008, 39면 참조. 이는 마치 지금까지 정형적으로 확립되어 유지되고 있는 “일시적 오락은 도박이 아니다”라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우연한 승패에 재물을 거는 행위는 그것이 국수대기에 불과할지라도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의 판례변경은 단순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논의를 넘어, 관습법적용금지의 원칙의 관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3) 대법원 1988.4.12. 선고, 87도2709 판결; 대법원 1988.10.24. 선고, 88도1680 판결;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2138 판결;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1948 판결; 대법원 1982.5.25. 선고, 82도715 판결;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도2715 판결; 대법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대법원 1969.11.26. 선고, 69도85 판결.

성권자 아닌 자가 복사한 경우라도 이를 어떠한 문서에 관한 죄에서 포섭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는 문서에 대한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전혀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반대의견(이재성 대법관)의 관점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위조한 문서를 전자복사기로써 복사본을 만들어 낸 경우에 그 복사본은 형법 제231조 소정의 문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복사본을 만들어 낸 행위를 「타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그 행위가 형법 제231조 소정의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경우 문서위조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된 유추확장해석이 되며 같은 법조 소정의 문서의 개념 속에 전자복사본은 포함되고 필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그 규정을 다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형법법규의 명확성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대의견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가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본을 복사하는 행위는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위조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리해석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반대의견의 관점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복사문서의 문서성 인정에 관한 현실적 필요성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즉 반대의견에서도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가 그 문서의 내용에서부터 모양,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줌으로써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할 염려가 있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 이어서 진정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위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이 있었던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위임장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을 진정한 위임장의 복사본인 것처럼 제시·행사한 경우 그 행위가 위법하고 심히 부도덕한 것임을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이러한 관점이라면,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1995년 12월 29일의 개정형법 제237조의 2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관점이라면 제237조의 2가 신설되기 이전이라도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경우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인정 못할 바도 아니다. 즉 당시의 상황이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진정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위조문서행사죄의 객관적인 목적론적 해석⁴⁾은 대상판결에 대한 다수의견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게 된다.⁵⁾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도 원본을 복사하여 이를 가지고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는 위조문서행사가 아니라, 위계나 기망을 수단으로 범하는 다른 범죄, 예컨대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성립만이 가능할 뿐이다.

3. 별개의견(이회창 대법관)의 관점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위조문서의 원본을 복사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위조가 완성되어 작성명의의 진정이 침해된 문서의 표시내용을 사본으로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고 복사로서 새롭게 그 문서의 작성명의의 진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본의 작성행위를 문서의 위조라고 볼 여지가 없으나, 위조문서를 전자복사나 사진복사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은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원본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서 복사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본을 제시하는 행위는 기계적 복사라는 중개수단을 통하여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문서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되므로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는 별개의견이 제시되었다.

별개의견에서는 복사행위가 위조행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반대의견과 입장을 같이 한다. 다만 별개의견에서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4)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에 관하여는 이정원, 앞의 책, 32면 이하 참조.

5) 오영근, 형법각론, 711면은 우리의 언어관용에서 복사문서도 당연히 문서라고 하므로 제237조의 2 없이도 복사문서를 문서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복사문서가 문서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독일 형법의 해석론을 쓸데없이 우리 형법의 해석에 도입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서란 문자 또는 문자에 갈음하는 부호에 의하여 구체적인 의식내용과 작성명의를 표시한 서면 기타 물체를 말하며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이러한 문서가 갖는 증명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능과 신용성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바, 이러한 문서의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전자복사나 사진복사 등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의식내용과 작성명의를 표시한 문서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증명문서로서의 사회적 기능과 신용성을 인정받아 통용되고 있으므로 그 문서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다수의견의 기본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문서의 원본을 복사하는 행위자체는 이미 위조가 완성되어 작성명의의 진정이 침해된 문서의 표시내용을 사본으로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고 복사로서 새롭게 그 문서의 작성명의의 진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본의 작성행위를 가리켜 문서의 위조라고 볼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위조문서행사죄에서는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즉 위조문서의 행사는 위조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하는 등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제시라 함은 문서자체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상대방이 지각작용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내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제시방법은 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문서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원본 그대로 전달하는 중개수단을 통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위조문서를 타인에게 환등기로 영사하여 제시하거나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도 영사나 전송 등의 중개수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조문서원본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⁶⁾

이와 마찬가지로 위조문서를 전자복사나 사진복사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은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원본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서 복사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그 문서 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본의 제시는 기계적 복사라는 중개수단을 통하여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끔 제시하는 것으로서 환등기의 영사방법이나 팩시밀리의 전송

6) 同旨, 신동운, 복사문서와 공문서위조죄, 고시연구 제22권 제2호, 1996.01, 27면 이하, 37면 이하; 이정석, 복사문서의 문서성, 사법행정 제32권 제5호, 1991.01, 89면; 同趣旨, 하태훈, 복사문서의 문서성, 형사판례연구 I, 1994. 4, 213면, 214면 이하.

방법과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문서원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위조문서의 복사행위는 문서위조행위가 아니어서 그 사본 자체를 위조문서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본을 제시하는 행위는 위조문서원본을 복사라는 중개수단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한다.

별개의견에서는 위조문서행사에서 직접적인 행사 이외에 간접적인 행사를 인정하고, 위조문서를 복사하는 행위를 위조문서행사를 위한 중개수단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별개의견은 위조문서행사죄의 불법내용을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끔 제시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조문서행사죄의 불법내용은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끔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끔 제시하는 것'만으로 위조문서행사죄의 불법내용이 충족된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 위조문서행사죄를 형법이 처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문서위조죄의 불법내용의 핵심은 그것이 진실한 문서이든 허위의 문서이든 관계없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문서를 용도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전혀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데에 있다. 허위의 문서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끔 제시하는 것은 기망행위 내지 위계행위에 해당할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나 신용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가 성립이 가능할 뿐이다.

4. 대상판결에서 문서위조행위와 위조문서 행사행위 대한 분석

대상판결에서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전자복사하여 그 사본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요지의 서술에는 모순된 내용이 들어 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복사행위를 위조문서행사라고 평가하지 않는 한 위임장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⁷⁾ 또한 대상판결에서도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7) 그러나 신동운, 위의 논문, 27면 이하; 이정석, 위의 논문, 89면; 하태훈, 위의 논문, 214면

또는 개별의견 어느 의견에 의해서도 복사행위를 위조문서행사라고 평가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개별의견에서는 복사행위를 위조문서의 간접적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上記 '3. 별개의견(이회창 대법관)의 관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별개의견에서 위조문서의 간접적 행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행위들은 위조문서의 행사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망행위나 위계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최초로 위임장을 위조한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복사하여 복사본으로 상대방을 속이려 했을 뿐이며, 따라서 최초의 위임장 위조행위에는 이를 용도에 따라 행사할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조한 위임장을 복사한 행위가 문서위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실제로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이를 위조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복사행위가 위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컬러복사를 통하여 진정한 문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복제한 경우, 이를 복사물이 아닌 진정한 문서로 행사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예컨대 주차허가증 등을 컬러복사기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사물을 진정한 문서가 아닌 복사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문서가 존재한다"고 속이는 기망행위나 위계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이러한 복사물을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경우라도, 이는 문서의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문서가 존재함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위조한 위임장을 복사한 행위를 문서위조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를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또는 별개의견 모두가 문서위조죄 내지 위조문서행사죄의 구조 및 보호목적에 오해하고 있다. 형법에서 문서에 관한 죄는 기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문서에 관하여 성립의 진정에 대한 신뢰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특히 유형위조에 대해서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전혀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문서에 관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무형위조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에서는 최초의 문서작성행위를 당연히 문서위조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문서내용의 진실에 대한 신뢰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형위조는 개념적으로 작성권자에 의한 작성, 즉 문서위조죄의 불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위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은 위조문서행사죄의 핵심적인 불법내용이 될 수 없다. 위조문서행사죄의 핵심적인 불법내용은 그것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관계없이 작성권자 아닌 자가 작성한 부진정문서를 그 문서의 용도에 따른 기능적 사용으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데 있다.

III. 개정형법 제237조의 2와 복사문서의 문서성

문서는 사상이나 관념의 표시 그 자체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기계로 복제할 것에 불과한 복사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⁸⁾은 대상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였으며, 그 후 개정형법 제237조의 2는 “이 章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電子複寫器), 모사전송기(模寫電送機)(소위 팩시밀리)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의 해석에서 복사문서도 문서로 간주된다.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복사문서가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근거로 한 것이며, 1995년 12월 29일의 개정형법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형법 전후에 걸쳐 대상판결 이후 대법원이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경우는 다음의 3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1.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8)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대법원 2000.9.5. 선고, 2000도2855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785 판결;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도2389 판결; 대법원 1994.9.30. 선고, 94도1787 판결; 대법원 1994.3.22. 선고, 94도4 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도2226 판결.

대법원이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⁹⁾이다. 유사한 경우로서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팩시밀리 전송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¹⁰⁾도 있다. 이 경우는 외형적으로 최초의 위조문서가 작성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경우 다수설¹¹⁾은 복사행위 자체를 문서위조행위로 파악한다. 이는 개정형법 제237조의 2에 의하여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설에 의할 경우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즉 최초로 작성된 문서는 위조문서(복사물)를 작성(복사)하기 위한 초안¹²⁾에 불과할 뿐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도 또 하나의 별개의 위조문서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다수설의 일반적인 서술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복사행위 자체를 문서위조로 파악하는 한, 이를 위하여 제작한 최초의 위조문서는 증명목적이 결여되어 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에 따라 최초의 문서작성에는 행사의 목적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문서위조죄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다. 결국 다수설은 증명목적이 결여된 문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사의 목적이 없는 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소수설¹³⁾은 복사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최초로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이며, 이를 복사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설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최초의 문서 작성과 복사행위 각각을 문서위조행위로 보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¹⁴⁾ 다

9)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785 판결;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도2389 판결; 대법원 1994.3.22. 선고, 94도4 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도2226 판결.

10) 대법원 1994.9.30. 선고, 94도1787 판결.

11)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794면; 박상기, 형법각론, 524면; 배종대, 형법각론, 682면; 오기두, 주석형법 각칙(2), 547면; 임웅, 형법각론, 635면; 정영일, 형법각론, 582면; 진계호, 형법각론, 578면.

12) 문서의 초안은 증명목적성이 결여되어 증명기능이 부정되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이정원, 앞의 책, 634면 이하, 637면 참조; 대법원, 1992.1.17. 선고, 91도2837 판결 참조.

13) 김일수, 한국형법 IV, 268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736면;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627면.

14) 소수설에서도 복사본을 제시·사용하는 행위가 문서성이 인정되는 위조문서의 행사라고

만 두 범죄행위에 대한 죄수판단¹⁵⁾에서만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복사행위에 대해서 문서위조행위 이외의 다른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수설도 최초의 문서 작성과 복사행위 각각을 문서위조행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다수설에 대한 동일한 비판이 유효하게 된다.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팩시밀리 전송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는 상대방의 팩시밀리 기기에 출력됨으로써 문서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위 다수설과 소수설에 의할 경우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가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¹⁶⁾과 판례¹⁷⁾의 입장이지만, 이 경우는 이러한 입장에서 두 범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의 관계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입장¹⁸⁾이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범조경합을 인정하는 입장¹⁹⁾ 또는 이들을 경과범죄로 이해하여 보충관계에 의한 범조경합을 인정하는 입장²⁰⁾에서는 이들 각각의 입장이 유지된다. 이러한 죄수판단의 문제 이외에는 상기(上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2. 피복사물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복사한 후 사용하는 경우

대법원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한다.

- 15) 오히려 다수설에서는 두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죄수판단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주장하는 관점에 따라 실체적 경합이나 상상적 경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소수설과 같이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접속범의 인정도 가능할 수 있다.
- 16) 김성천·김형준, 앞의 책, 830면; 박상기, 앞의 책, 545면; 백형구, 형법각론, 533면 이하; 손동권, 형법각론, 661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632면; 진계호, 앞의 책, 589면.
- 17) 대법원 2006.6.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대법원 2005.2.24. 선고, 2002도18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도1216 판결;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722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378 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529 판결.
- 18) 배종대, 앞의 책, 652면; 이재상, 형법각론, 578면.
- 19) 김일수, 앞의 책, 297면; 김일수·서보하, 앞의 책, 734면; 정영일, 앞의 책, 493면 이하. 다만 이 견해는 최초의 범행의사가 행사를 포함한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범조경합을 인정하고 새로운 범행의사에 의한 행사인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 20) 오영근, 앞의 책, 728면; 임웅, 앞의 책, 638면.

사용한 경우²¹⁾에도 복사문서에 대하여 문서성을 인정하였다. 이 경우는 복사하는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위조문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즉 복사과정에서 피복사물과는 다른 새로운 복사물이 작출²²⁾되고 있으므로 외형적으로는 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위조행위의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진정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대고 복사하여 새로운 복사물을 만든 경우에는 복사과정 이외에 문서위조행위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개정형법 제237조의 2의 규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정 적합한 사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사안과 같은 경우, 즉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만든 후에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는 행위와 ②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 및 ③ 이를 다시 복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37조의 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

개정형법 제237조의 2에 의하면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간주된다. 따라서 작성 내지 복사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이며, 본인의 증명서라 할지라도 본인이 작성권자는 아니다. 따라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개정형법 제237조의 2

21) 대법원 2000.9.5. 선고, 2000도2855 판결.

22)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736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627면.

에 의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는 행위도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은행이나 휴대폰대리점 등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²³⁾은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사행위를 문서위조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복사하는 경우라도 그 문서가 진실한 경우라면 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채무자가 이 영수증을 복사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영수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시 후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진실한 문서의 경우라도 작성권한 없이 이를 작성하면 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인정되지만, 이를 복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정형법 제237조의 2의 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최소한 ‘허위의 문서’로 한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

개정형법 제237조의 2에 의하면 복사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의 문서의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문서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²⁴⁾ 다만 위조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²⁵⁾로 문서를 작성해야

23) 대법원 2000.9.5. 선고, 2000도2855 판결.

24)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736면; 오영근, 앞의 책, 724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627면;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610 판결.

25) 김성천·김형준, 앞의 책, 796면; 김일수·서보학, 위의 책, 737면; 배종대, 앞의 책, 689면; 손동권, 앞의 책, 659면; 오영근, 위의 책, 724면 이하; 이재상, 앞의 책, 575면; 이형국, 형법각론, 609면; 임웅, 앞의 책, 636면;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628면; 조준현, 형법각론, 511면; 진계호, 앞의 책, 587면; 대법원 1997.12.26. 선고, 95도2221 판결.

하므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만으로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는 행위

개정형법 제237조의 2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한 복사물은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로 간주된다. 이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는 행위는 문서위조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上記) (1)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와 (2)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별도의 문서위조행위의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하는 행위가 아니며, 단지 (3)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1)의 행위와 (2)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독자적인 문서위조행위로 보여 질 수 있을지라도, 여기에는 이를 문서로서 행사할 목적이 결여되어 있으며, 단지 다음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서위조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는 상기(上記) 1.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최초로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독자적인 문서위조행위가 될 수 없다. 여기에는 이를 문서로서 행사할 목적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개정형법 제237조의 2의 규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복사문서를 위조문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사하기 위해서 최초의 피복사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증명목적이 결여된 위조문서의 초안의 작성에 불과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사본을 변조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법원은 사본(공도화)을 변조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용²⁶⁾한 경우에도 복사문서에 대하여 문서성을 인정하였다. 이 경우는 변조의 대상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문서에 관한 죄에서 원칙적으로는 진정문서만이 변

26) 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

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²⁷⁾, 개정형법 제237조의 2에 의하여 공도화 사본도 공도화로 간주되므로 사본의 변조도 도화변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복사함으로써 새로운 복사물을 제작하였다. 본래 변조라 함은 진정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정문서에 단순히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사물을 제작한 것이므로 개념적으로는 변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이다.²⁸⁾ 물론 내용적으로는 변조에 불과한 변경이 가해졌지만, 새로운 공도화의 복사제작을 변조로 해석해야 한다면 문서에 관한 죄에서 제237조의 2 규정이 가지는 결함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²⁹⁾

IV. 결 론

형법의 해석에서 대상판결을 시작으로 복사문서의 문서성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1995년 12월 29일의 개정형법 제237조의 2에 의하여 명문으로 인정되었다.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내용은 위조·변조문서를 행사할 때 수반하는 기망이나 위계에 불과한 것이다. 즉 위조·변조의 문서의 행사가 가지는 기망이나 위계의 수단이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변조문서행사죄만 성립하게 된다. 만약 위조·변조의 문서의 행사가 가지는 기망이나 위계의 수단이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위조·변조문서행사죄 이

27) 김성천·김형준, 앞의 책, 797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738면; 박상기, 앞의 책, 526면; 배종대, 앞의 책, 689면; 손동권, 앞의 책, 661면; 오영근, 앞의 책, 725면; 이재상, 앞의 책, 576면; 이형국, 앞의 책, 609면; 임웅, 앞의 책, 636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629면; 정영일, 앞의 책, 588면; 조준현, 앞의 책, 512면; 진계호, 앞의 책, 588면;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984 판결.

28) 그러나 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은 이 경우 공도화변조죄와 동 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29)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도7339 판결; 서울지법 2003.8.7. 선고, 2003고단643 판결은 공문서의 일부를 가린 채 또는 일부만을 오려 붙여 복사한 경우에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외에 해당 기망이나 위계에 의한 별개의 범죄도 성립하고, 두 범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³⁰⁾ 복사물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가 타인에 대한 기망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망이나 위계에 의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문서위조·변조행위 이외에 복사행위를 문서위조·변조행위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

대사판결 이후의 대법원의 입장이나 개정형법 제237조의 2와 같이 복사문서에 대해서 문서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변조의 개념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조는 개념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타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로 작성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을 진정문서로 오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복사본을 제시할 경우 일반인들은 진정문서가 존재할 것이라고 오인할 뿐이다. 이러한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물론 전자복사기에 의한 복사물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문서로 오인할 정도로 복제된 경우에는 문서위조의 개념을 모두 충족시키는 위조에 해당한다. 예컨대 타인의 영업허가증이나 통행증 또는 주차증 등을 컬러복사기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특히 복사물의 제작은 변조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것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 변조는 개념적으로 진정한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복사문서에 문서성을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기(上記) III.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한 1995년 12월 29일의 개정형법 제237조의 2는 문서에 관한 죄에서 위조·변조의 개념을 무시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가지고서는 문서에 관한 죄를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 규정은 하루빨리 삭제되어야 한다. 대사판결 이후의 대법원의 입장도 조속히 변경되어야 한다.

30) 일반적으로 위조·변조 문서를 행사(위조사문서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위조공문서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하여 범하는 범죄로는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복사문서행사를 통하여 사기죄를 범할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만 인정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주제어 : 복사문서, 문서위조죄, 복사문서의 문서성, 형법 제237조의 2

참 고 문 헌

-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2006.
김일수, 한국형법 IV, 1997.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2004.
박상기, 형법각론, 2005.
배종대, 형법각론, 2006.
백형구, 형법각론, 1999.
손동권, 형법각론, 2006.
——, 형법각론(방송대교재), 1994.
오영근, 형법각론, 2005.
이재상, 형법각론, 2004.
이정원, 형법각론, 2008.
임 응, 형법각론, 2005.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2006.
정영일, 형법각론, 2006.
조준현, 형법각론, 2002.
진재호, 형법각론, 2003.
- 신동운, 복사문서와 공문서위조죄, 고시연구 제22권 제2호, 1995. 1.
이정석, 복사문서의 문서성, 사법행정 제32권 제5호, 1991. 1.
하태훈, 복사문서의 문서성, 형사판례연구 I, 1994. 4.
- Leipziger Kommentar, Strafgesetzbuch, 10. Aufl., 1985.
——, Strafgesetzbuch, 11. Aufl., 1993.
Maurach/ Schroeder/ Maiwald, Lehrbuch BT-I, 8. Aufl., 1995.
Nomos Kommentar, StGB, 2. Aufl., 2005.
Otto, Strafrecht BT, 7. Aufl., 2005.
Schmidhäuser, Studienbuch BT, 2. Aufl., 1983.
Schönke/ Schröder Kommentar, Strafgesetzbuch, 26. Aufl., 2001.
Systematische Kommentar, Strafgesetzbuch, 6. Aufl., 1995.

Tröndle/ Fischer Kommentar, StGB, 53. Aufl., 2006.

Wessels, Johannes/ Beulke, Wern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30. Aufl., 2000.

[Zusammenfassung]

Druckduplikat als Objekt des Urkundefälschung und dessen Gebrauch?

- Daebubweon 1989.9.12, 87do506 -

Lee, Jeong-Weon

Professor, Youngnam Univ.

Seit des betreffenden Urteils wird ein Druckduplikat als Objekt des Urkundefälschung in der Auslegung des Strafrechtes anerkannt. Dies wird in § 237/2 des neuen Strafgesetzbuches von 1995.12.29 ausdrücklich hineingekommen. Heutigen Zeit funktioniere ein Druckduplikat als ein Originalurkunde ersetzende Beweismittel, und deshalb brauche dessen sozial Vertrauen zu schützen.

Aber das beim Gebrauch von verfälschten Urkunde auftauchende Unrechtsgehalt ist nur Vorspiegelung oder List. Wenn die ein Gebrauch von verfälschten Urkunde beinhaltende Vorspiegelung oder List keine andere Deliktstatbestand erfüllen würde, dann würde man nur die Gebrauch von verfälschten Urkunde anerkennen müssen. Wenn dagegen die ein Gebrauch von verfälschten Urkunde beinhaltende Vorspiegelung oder List andere Deliktstatbestand, z. B. Betrug, erfüllen würde, dann stehen beide Tatbestände in Idealkonkurrenz. Daher braucht man nicht die Druckduplikat als Objekt des Urkundefälschung und dessen Gebrauch zu anerkennen.

§ 237/2 des neuen Strafgesetzbuches von 1995.12.29, die ein Druckduplikat als Objekt des Urkundefälschung und dessen Gebrauch ausdrücklich anerkannt, ist nicht richt. Mit diese Regelung kann man die Delikte über die Urkundefälschung nicht richtig auslegen. Diese Regelung sollte sofort weggefallen werden.

Schlüsselwörter : ein Druckduplikat, Urkundefälschung, Urkundecharakter
der Druckduplikat, § 237/2 des Strafgesetzbuches